

5G 주파수 경매 3.6조에 종료 이통사, 5G 무한경쟁 스타트!

시작가 보다 3423억원 올라
12월부터 최대 10년간 이용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 경매 확보 전이 이들 만에 마무리되면서 각 사들이 내년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경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매를 통해 이동통신 3사가 확보한 주파수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서비스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속개된 2일차 주파수 경매에서 전체 낙찰가 3조 6183억에 결정돼 경매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최저경쟁가격 시작가인 3조 2760억 원에서 3423억원이 뛰어오른 가격이다. 최대 속도가 20Gbps(기가비피에스)에 달하는 5G는 롱텀에볼루션(LTE)에 비해 20배 빠르다. 신호 지연시간도 짧고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가능해 자율주행차 등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주파수 대역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5일부터 펼쳐진 5G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건 이유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지하 1층에 마련된 경매장에 입실해 치열한 수 싸움에 돌입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3.5GHz 대역은 이날 9번째 라운드에서 1단계가 종료됐다. 블록당 968억원에 SK텔레콤, KT가 각 100메가헤르츠(MHz) 폭씩, LG유플러스는 80MHz폭을 할당받았다. 주파수 위치를 결



서울의 한 전자제품 전문매장의 휴대전화 판매 업체. /연합뉴스

정하는 2단계를 진행한 결과, 위치는 LG유플러스는 3.42~3.5GHz, KT는 3.5~3.6GHz, SK텔레콤 3.6~3.7GHz 순으로 결정됐다. 1단계와 2단계를 합한 3.5GHz 대역의 최종 낙찰가는 SK텔레콤이 1조 2185억 원, KT는 9680억원,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이다.

첫날인 15일 1단계 1라운드에서 경매가 종료됐던 28GHz 대역의 경우 블록당 259억원에 각 사가 800MHz폭을 할당 받았다.

5G 주파수 경매가 종료됐지만 확보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12월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3.5GHz 대역의 경우 12월부터 10년간, 28GHz 대역은 같은 날부터 5년 간 할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효율적인 네트워크 설계가 가능하도록 3.5GHz 대역과 28GHz 대역을 동시에 공급했다. 3.5GHz 대역의 경우 5G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고 28GHz

대역은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통신 장비 도입과 향후 5G 이동통신과 호환될 단말을 마련하는 것도 이통사의 과제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라호야에서 열린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 및 80차 무선총회에서 3GPP 및 글로벌 통신사, 네트워크장비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50여개 업체가 5G 국제 표준을 공표하기도 했다. 5G 글로벌 표준 완성과 주파수 경매 마무리에 따라 5G 상용 단말·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경매 이후 통신장비 발주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늦어도 9월까지 통신장비를 발주해야 일정에 발맞춰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지난해부터 5G RFP(입찰제안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5G 장비 도입 준비를 본격화 했다.

장비와 네트워크가 구축된다고 해도 5G 단말이 마련돼야 이용자들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LG유플러스는 5G 단말 기술요구서를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LG전자에 배포하기도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번에 할당된 5G 주파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새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해 국민 경제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확보한 5G 주파수 경매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편입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삼성전자 총매출·조세공과금 국내 비중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총매출	200조7천억원	201조9천억원	239조6천억원
국내매출	20조8천억원	20조2천억원	31조6천억원
국내매출 비중	10%	10%	13%
총 조세공과금	7조8천억원	8조9천억원	15조1천억원
국내납부 비중	51%	67%	81%

해외서 매출 87% 버는 삼성전자 세금은 국내에 80%, 총 15조 납부



매출액 239.6조·순익 42.2조
전년 세금 8.9조... 70% 늘어

지난해부터 시작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15조1000억원의 세금을 각국 정부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87% 가량을 해외에서 올렸으나 세금은 80% 이상을 국내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삼성전자 실적보고서 및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종속회사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낸 조세공과금은 총 15조1000억원이다.

전년도의 8조9000억원에 비해 70% 늘어난 수치이며, 2016년 기록한 7조8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이렇게 세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역대 최고 실적 덕분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239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6% 늘어났다.

영업이익은 53조6000억원으로 83.6% 급증했다.

순이익은 85.9% 증가한 4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납부한 조세공과금 가운데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에 낸 액수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 10%를 냈다. 미주와 유럽에서 8%, 기타 지역에서 1%를 각각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조세공과금의 국내 납부 비중은 2014년 53%에서 2015년에는 51%로 다소 떨어졌다.

하지만 2016년 67%까지 오른 뒤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주 81조원(34%) ▲유럽과 CIS 44조4000억원(19%) ▲중국 38조3000억원(16%) 등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31조6000억원이며 전체의 13% 정도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지만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공과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내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국내 납부 비중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與 압승, 재건축 빙하기 장기화... ‘도시재생’ 중심이동

재건축시장 지각변동

〈중〉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

재초환 폐지 가능성 완전 사라져
반포 현대아파트 등 ‘부담금 폭탄’

지방선거 ‘재건축 활성화’ 공약에
일부 지역서 ‘규제 완화’ 기대감도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을 향한 우려와 기대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여당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건축 규제를 더 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 당선인이 경기 부양을 담은 공약을 내걸어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도 존재한다.

◆ 서울·경기·인천 ‘재건축 뒷전’ 될 듯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후 재건축 시장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에 칼날을 들이민 가운데 지방 정부(자치단체)까지 여당이 장악했기 때문.

이번에 당선된 수도권 시·도 지자체장의 공약만 봐도 그렇다. 서울·경기·인천에선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으로 방침이 옮겨질 전망이다.

(6·13 지방선거 당선인 재건축 관련 공약 및 입장(수도권 및 서울 일부))

지역	당선인	소속	내용
서울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경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지원
인천시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대안 마련
강남구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 적극 지원 등
서초구	조은희	자유한국당	재건축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송파구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
용산구	성장현	더불어민주당	이촌1동 한강맨션 재건축 추진, 효창 4,5,6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등
동대문구	유덕열	더불어민주당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 지원
노원구	오승록	더불어민주당	월계1동 동신아파트 재건축 추진, 상계주공 8단지 재건축 사업 지원 등
양천구	김수영	더불어민주당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3선에 성공, 현 정부의 재건축 규제 프레임에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 박 시장은 뉴딜 및 재초환으로 마련된 재원을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통지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등 재초환이 적용될 단지는 부담금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 시장이 지난 8년간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온 만큼 한강변 재건축 단지 층수 제한 등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에 방점을 두고,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약으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내걸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택, 신생아 출산가정 아 이사랑 공공임대를 특별공급도 공약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 연계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맞춤형 특화 리모델링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도 비슷한 분위기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보유세 개편안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통해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보유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28일 전체 회의에서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 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어찌나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에 담은 후보도 대거 당선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망이 나온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지

자체장 당선인은 재건축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태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압구정 현대,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구제책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건축 활성화, 관리처분인가,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을 공약에 담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재건축 촉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공약했던 후보들이 당선됐다. 일부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심교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부 당선인의 공약 등에 따라) 약간의 규제 완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나 서울 시장, 여당의 기조가 정반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여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당분간 재초환 시행, 재건축 안전 진단 검증 강화, 재건축연한(30년→40년) 연장 등 재건축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다만 강력한 정책은 시장은 잠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주거 공급 관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